

5.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

정 책 방 향

- ◇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
- ◇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노력하고, 산업계의 수요가 반영된 인력양성체제를 마련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
- ◇ 중소·벤처기업 정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
- ◇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기업 문화 정착에 노력

가. 기업규제의 개혁

- 불합리한 규제·관행 정비를 위해 「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」를 실시, 발굴된 규제·애로는 범정부적으로 해결

* 경제단체, 산자부, 지자체 합동으로 T/F 구성, 추진(4월)

-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도입타당성 검토를 강화

- 입법예고시 규제영향 분석결과의 공표, 제3기관에 의한 최종영향 평가(필요시) 등 기업규제 영향평가를 강화
- 「규제사전예고제」 및 「기업규제 일몰제」 적용을 강화

나.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인력 양성

□ 산업계가 주도하는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마련

- 산업별 『인적자원개발기구』를 설치하여, 산업계 주도로 업종별 인력수요, 교육훈련 수요 등을 분석·제시

* 사업자단체, 근로자단체, 교육훈련기관,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고, 3~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확대

- 산업인력 통계인프라를 구축, 산업인력 수급분석 기반 강화

* 업종·지역·사업체 규모별로 취업자수, 부족인원, 임금, 교육훈련 등 『산업인력 통계체제』 마련

□ 초·중·고 → 대학 → 대학원의 이공계 인력육성 경로 혁신

- 초·중·고생 : 청소년 산업기술체험캠프 운영(5년간: 250명)

- 고교생, 대학(원)생 : 산업발전장학금 지원(5년간: 1만명)

- 석·박사 :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석박사 양성(5년간: 1만명)

- 졸업후 : 미취업자 기술능력 향상 지원(5년간: 3천명)

□ 산·학 연계형 공학교육 강화

- 지역별·산업별 『기술인력지도』를 작성하여 교육현장에 전파

-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이공계 대학 발전방안 수립·추진

- 공과대학에 기업 CEO 출강 지원('03: 120개 → '07: 600개 강좌)

다. 중소기업의 활력이 넘치는 시장시스템 구축

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
- 시장에 의해 『창업→성장→퇴출』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
 - * 단체수의계약·고유업종·지정계열화 등 경쟁저해 제도 개선
-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집중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
 - 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: ('02) 1,856개 → ('03) 3,000개
 - * 중소기업 기술지원 예산 : ('02) 1,894억원 → ('03) 2,045억원
- 인력난 완화를 위한 『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』 제정 추진('03) 및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('03 : 174억원)

□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

- 건실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,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
-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('03 : 80개 품목)의 본격 시행 및 해외벤처지원센터를 통한 판로·수출 확대

□ 대기업-중소·벤처기업간 생산적 협력 강화
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
 - * 「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」 설치·운영 추진
 - *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
- 공동 기술개발 및 생산협력 사업 촉진
 - * 대기업 요구품목을 부품·소재 로드맵에 반영, 공동개발시 우선 지원
 - * 업종별 협력모델 개발 및 확산(반도체 파운드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등)

라.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

- 생산성향상 성과를 노사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“생산성협약 임금제” 개발·보급

* 주요 시범업종 중심으로 운영 후, '05년까지 타 산업에도 확산

- CEO 및 근로자 대상 교육강화 및 노사간 신뢰구축 지원

-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『인력개발 혁신지원센터』를 설립, 근로자 맞춤형 교육 실시

-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『신뢰경영지표』 개발·보급

- 주5일 근무제, 비정규직 보호제도, 외국인력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노사제도의 선진화 추진

-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시책을 병행

마. 기업의 윤리경영의 정착 유도

- 윤리경영으로 존경받는 기업은 투자자, 소비자, 기업간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기업가치와 브랜드 이미지, 임직원 자긍심 제고에 따른 기업성과의 향상이 가능

* '99년 미국 DePaul大의 300개 대기업의 윤리경영-경영성과 관계 비교분석 : 윤리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이 갖추지 않은 기업보다 2배 이상의 주주이익 실현

◇ 윤리경영이란?

- 기업이 주주, 고객, 협력업체, 임직원, 지역사회 및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준수해야 할 가치를 지키며 경영하는 것을 의미 (예) 투명한 회계, 공정한 약관, 공정한 거래, 건전한 작업환경, 성실납세, 환경경영, 지역사회 기여 등

□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기업 윤리경영 평가 실시('03. 4~9월)

*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윤리경영 백서발간, 모범기업 홍보('03.하반기)

□ 산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체제 도입

* '03. 상반기 윤리경영수준 진단 및 기관별 윤리경영 활성화 방안 수립

* 공기업 경영평가시, 윤리경영수준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

□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

바.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참여 정책운용시스템 구축

□ 기업의 사기진작과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해 민·관 합동 『산업경쟁력회의』를 설치

○ 기업활력 및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정책 (예: 산업인력 수급불균형)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

□ 산자부내에 국민참여 정책운용시스템 구축

○ 정책입안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전문가 토론 마당 개설, 산·학·연 전문가로부터 정책의견 수렴

○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연간 2회 전국의 약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만족도를 평가하여, 이를 정책개선에 활용

○ ombudsman을 임명(참여연대 등 NGO 추천)하여,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국민고충·불만을 신속 원만하게 처리

